

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28.16 (-6.99)	661.33 (-9.61)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2.620 (+0.017)	1426.00 (+7.90)



## 탄핵 국면 장기화... 증시·환율·소비 韓경제 곳곳 비상

외국인 매도세에 증시 흔들  
3거래일간 1조335억 순매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지속  
소매판매 10분기 연속 감소  
수출·투자도 불확실성 확대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국면 장기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 시기보다 수출이 부진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성장, 내수부진, 경기침체가 겹쳐 대한민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3거래일(12월 4~6일) 동안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35억 원 어치를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사태 전인 지난 3일 외국인은 5655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매도세로 돌아섰다.

### ◆尹 대통령 탄핵안 무효... 불확실성 커져

문제는 이 같은 탄핵 국면이 장기화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전날인 2004년 3월 8일, 코스피지수는 900으로 장을 마쳤다. 이후 안건이



최상목 경제팀 합동성명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의결된 12일 코스피 종가는 849로 5.67% 하락했고, 탄핵심판 선고일(기각)인 2004년 5월 14일에는 768로 발의 전날과 비교해 14.7% 떨어졌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발의 전날인 2016년 12월 2일 코스피가 1971을 기록했다. 이후 탄핵안 의결일에는 코스피가 2025로 2.74% 오르고, 탄핵심판 선고일(인용)에는 2097로 발의 전날과 비교해 6.39% 상승했다. 대통령에 따라 코스피의 방향은 달랐지만 변동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의결이 여당(국민의힘) 불참으로 무효화된 것과 관련해 경제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정국안정 방안을 당(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불확실성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을 부추겨 코스피를 떨어뜨리고 원·달러 환율을 고점(원화 가치 하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계엄사태'발 환율 상승...경기침체 우려 ↑

특히 끝없이 오르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기준 달러당 원화 값은 1419.2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전인 11월 1일 1379.4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당선이 확정된 이후(11월 6일) 1396.2원으로 오르다가 12월 2일 1401.3원으로 1400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달러당 원화 값은 12월 3일 1402.9원에서 12월 6일 1419.2원으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준다. 기업에 미치는 영

향은 고스란히 상품의 가격에 반영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2020년=100)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4~6월·-0.2%)에 꺾이기 시작한 이후 10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장기간 기록이다.

수출도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는 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 2기행정부가 세워지기 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기에 탄핵 국면이 이어지면서 신규 투자계획은 고사하고 기존 계획마저 보류할 우려가 커진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대내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교역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 성장을 예상치를 1.7%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로 지난 9월 2.2%보다 0.5%포인트(p)나 낮아졌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퇴진 추진... 국정안정 힘쓸것”

한동훈·한덕수 대국민 공동담화문  
국무총리와 주1회 이상 정례회동  
상식적 소통 통해 경제대책 마련  
예산안·민생법안 통과 野에 부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 다음날인 8일, 공동담화문 발표를 통해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당정이 합심해 공백없는 국정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가 필요하며 이날 정국 수습방안을 발표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

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국무총리와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을 통해 국정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동훈 대표는 “지

난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는 2시간30분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행할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야당에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면에 계속> /서예진·박태웅 기자 syj@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동연 “한덕수·한동훈 담화문 시간 끌기용에 불과”  
▲ 야당 “尹 대통령, 군 통수권 박탈해야” /사진 뉴시스

▲ ‘사의 표명’ 추경호 재신임될까... 계파 갈등 수면 위로  
▲ 탄핵 표결 무산에 민심 부글... 시민단체 규탄 잇따라



▲ 조국 “한동훈·한총리 ‘2차 쿠데타’ 도모... 탄핵 추진” /사진 뉴시스  
▲ 탄핵 앞둔 이상민 자진 사퇴... “국민께 송구”